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지역 조합 아파트로 내 집 장만하기
사이버 전쟁 현실화 '한국은 무방비'
남성 열광 '건축학개론' 이용주 인터뷰

애널리스트 10인 긴급 설문

‘반도체 승부수’ **SK** 미래는?

‘사모 펀드 황제’ 김병주의
특별한 성공 스토리

유통가에 편집매장 다각화 붐이 부는 까닭
기업행 택한 연예계 스타들의 현주소
경이적인 영업이익 3000% 증가 3사 비결은



한국경제신문

값 3,500원





외국인 광산 소유 제한하는 인도네시아

국가적 차원 천연자원 보호 주장 득세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2012년 3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Mine) 소유 지분 한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법령(Presidential Decree)을 공포했다. 새 법령에 따라 광산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생산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광산 지분의 49%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구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대 80%까지 지분 소유가 허용됐다. 다만 생산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최소한 20%의 지분을 처분하면 됐다. 이에 따라 비록 20%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대 6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생산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새 법령이 향후 체결될 신규 광산 관련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광산에까지 소급효를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외국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져 있다.

새 법령이 도입된 배경은 자원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수화 경향 때문이다. 2009년에 개정된 신(新) 광산법은 광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의회 등 정치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부인 석탄 등 천연자원을 너무 헐값에 해외에 팔아 넘겨 왔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돼 국가적 차원에서 천연자원을 보호하자는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됐다. 이러한 흐름은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에 두루 영향을 미쳐 광산에 대한 외국인의 최대 지분 제한 외에도 저순도 유연탄(low-rank coal) 등 천연자원의 수출을 2014년부터 금지하는 법령이 2012년 2월 9일 공포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련의 새 법령들이 인도네시아 자국 기업 및 기타 경제 주체들에게 천연자원 관련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심각한 위축과 관련 산업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석탄 등 천연자원 관련 산업 비중이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당연해 보인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새 법령의 효력 범위 내지 소급효에 대한 부분이다. 새 법령에 따른 외국인 최대 지분 제한이 향후 체결될 광산 개발 및 소유 관련 계약에만 미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대 석탄 광산을 보유

하고 있는 한 외국계 회사는 현행 계약이 만료되는 약 20년 후까지 현행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는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 측 관계자는 새 법령은 기존 광산 계약에도 적용되며 이미 인도네시아 유수의 외국계 석탄 업체들과 초과 지분 처분 및 로열티(Royalty), 기타 계약 전반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적 신용 평가 업체들이 최근 인도네시아 국채 등의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에 형성된 이해관계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투자 리스크를 새삼 재확인해 주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한 탄광.